

野 “대장동 항소 포기, 위선 개입”…與 “근거 없는 선동”

민주 “대검 기계적, 관행적 항소 자제”…국힘 “국조 통해 밝혀낼 것”

여야가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긴급 현안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 개최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며 “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항소 포기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권 차원의 사법 개입이자 정권의 후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 조사를 통해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항소 포기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강요된 결정이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며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고 손실과 사법농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에는 ‘정치검찰’, ‘표적 수사’라며 격렬히 반대하면서 정작 법원이 적절한 형량을 선고한 사건에는 ‘검찰이 끝까지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보다 뻔뻔한 이중잣대가 또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장윤미 대변인도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위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으며 반발한 것에 대해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항소에 대한 일선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달랐고, 대검의 지시에 대장동 일선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외압에 따른 굴복’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사건 항소 포기 직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국감 종합평가 기자회견담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현정(왼쪽부터) 원내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이기현 원내대표 비서실장, 문금주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여야, 무쟁점 민생법 우선 처리 방침

13·27일 본회의의…반도체특별법·가맹사업법 입장차

여야가 본격 입법·예산 전장을 앞두고 이번 달 본회의에서 무(無)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개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 등을 놓고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에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예정이다.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다시 전면

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언론과 통화에서 “예산 정국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무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K-스틸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보는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

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진 상태다.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합의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난 6일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는 위원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특히 13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법안 100여건이 상정돼있는 만큼 개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고 있다.

/연합뉴스

“명예훼손·모욕 대상 특정 국가 한정 안 해”

양부남, 형법 개정안 ‘중국만 보호’ 논란 설명…“정당한 비판 보호돼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 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의 대상을 특정 국가로 한정한 적이 없고, 전 세계 어느 국가·집단·개인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겨냥한 것”이라며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양 의원은 지난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비판은 보호돼야 하며, 기존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당 일각의 ‘중국만 보호’ ‘입막막 법’ 비판이 이어지는데 따른 설명이다.

양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 입법 논리는 헌법 제21조 4항의 한계를 근거로 한다고 강조했다.

타인의 명예·권리 및 공동도덕·사회윤리 침해는 금지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사실 적시 명예웨

손의 위헌성을 부정해 왔다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 기반의 모욕·비방’에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독일의 대중선동죄, 프랑스의 차별·중요 선동 가중처벌, 영국의 중요 선동 처벌 등 해외 입법례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중요발언·중요범죄 명시적 범죄화’ 권고도 함께 제시했다.

형량을 둘러싼 ‘중국 모욕 시 징역 5년’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집단을 이유로 한 모욕은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번 단계에서는 기존 허위사실 명예훼손·모욕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였다”고 반박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정진욱 “정부 AI 시티 사업, 광주서 추진돼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동남갑) 국회의원이 7일 “AI 시티(AI 특화시범도시)는 반드시 광주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AI 대전환(AI·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 시티 사업은 한 도시가 완전히 AI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사업으로 AI 인프라와 생태계가 탄탄하고, 현재 대규모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가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지 선정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4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다.



정진욱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광주 AI 모빌리티 국가신도시 조성 사업”은 자율주행 차량 실증과 운영을 위한 교통체계와 AI 기반 도시 통합 관리 시스템 등의 첨단 인프라가 구축된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면서 “이를 통해 AI 모빌리티 규제 프리존을 형성하고 이와 연계한 미래차 첨단 부품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